

회의	의원	정당	지역구	주요 발언	발언유형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기타
제19대국회 제326회 제2차 국회본회의(2014년 06월 19일)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도권 입지규제,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과도한 환경규제 등 덩어리 규제가 혁파되어야만 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19대국회 제331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5년 02월 10일)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것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8차 국회본회의(2015년 10월 15일)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하남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잔가지만 치고 덩어리 규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 이것을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8차 국회본회의(2015년 10월 15일)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하남	규제 개혁이 경제활성화다, 규제개혁이 되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총리께서 인식하고 과감하게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			
제334회 6차 국회본회의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이우현 의원 저는 정치 분야 지만 국민이 바라 는 것은, 경제 가 더 어려워 서 경제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 아마 거의 대다 수 국민의 뜻일 것 같아서 주로 경제 분야의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 서 참고가 돼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 는 데 큰 도움이 되면 고맙겠습니 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334회 6차 국회본회의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경기하남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 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 최근 정부가 비 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를 완 화하기로 되어 있습 니다만 이것은 현 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 으로 본인은 생 각하고 있습 니다. 경기도지역 대 부분이 도시지역이 고 도시지 역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331회 7차 20150227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경기하남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인 천이나 서울의 원주 민들은 몇 % 안 됩니다. 다 보면 영남 호남 충 청 강원 제주 에서 오신 우 리 국민들입니다. 그런 데 그분들이 지금 어 다 럽습 니다. 한 30년간 수 도권 규제 많 이 하면서 규제 지금..... 일본에 있 는 동경 같은 데도 수도권 규제했다 가 다 풀었습니 다. 선진국이 다 그런 절차를, 우 를 범하면서 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 도 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고 시행령을 다 고쳐 야 된다고 생각	○			

제326회 3차 2014062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경기하남	이제는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일 자리 창출하는 데 정부가 앞 장서야 되고요 . 또 부동산, 꼭 아파트 나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토 지나 임야나 농 지나 이런 부분에도 양도세나 등 록세나 취득세나, 한시적이라 도 좀 완화해서 모 든 경기가 회복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제326회 3차 20140620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보 면 용인 같은 경우도 1년 에 1500만 명 관광객이 옵 니다. 규제 때문에, 이 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받 지요. 또 일부 지 역은 군사시설 규제 받아요. 삼중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규제 속 에서 과연 15 00만 명의 관광객이 오 고,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중국 이나 동남아 에서 많이 오 는 데 숙박이 없어서 아 주 초라한 그런 데 가서 자 고, 또 제일 외국 관 광객들이 불편한 게 뭐냐 이 러면 숙박이라고 하 는 얘기를 들었 는데, 장관 님도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지요?"	○			
제320회 12차 20131121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보면 이 수도권 또 특히 2000만 우리 수도 권 시민들이 먹는 식수, 팔당상 수원에 대해서 용 인을 비롯해 서 7개 시군이 너무 나 많은 규제를 받 고 있습니다. 또 이 규 제가 30년 전 에, 이미 많은 1급수 물 을 7개 시군 시민들에 이 제는 깨끗한 물을 공급 해 주잖아요. 요즘은 기술 이 좋아서 모든 종말처 리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이제 규 제 풀어 줘야 됩니 다, 일부는. 그래서 그 분들이 재산상 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줘야 되고 요. 그것 안 풀어 주려면 수도물 값 올려서 그 7개 시군 시민들한테 재산권 보호 해 줘야 됩니다."	○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 (2015년10월6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대한민국 같이 작은 땅 에 수도권, 비 수도권이 어디 있고 지금 25 00만 명이 살면 한 형 제, 한 자녀 들이 다 와 사는 게, 1시간 반이면 다 지금 고향갈 수 있고 다 지방갈 수 있는데 미국 이나 중국이 나 이렇게 큰 나라 같 이 8시간, 1 0시간씩 가는 나라는 수도권, 비수도 권을 따지면 되지 만..... 지금 그렇다고 수 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 이 비수도권 으로 갑니까? 안 가 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는..... 런던이나 일본 도쿄나 다 수도권 규제해서 실패한 나라들입니 다. 그래서 다 규제 를 풀었어 요.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인천 시장으로서 과감하게 수도권 규 제 풀어야 된다고 중앙정부나 우리 국민들한테 호 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2015 년10월8일)	이우 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 라 이제 수도 권 규제도 풀 어야 된다. 수 도권의 청년 실업률이 제 일 높다.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줘 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자 연녹지 안에 서 행 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 다. 20%밖 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면 적도 늘려야 되 고 또 지금 용적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 (2015년 10월5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또 용인시 같은 경우는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을 36년째 평 택시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 어요. 아마 지사님 옆 집에 사는 사 람이 36년 동 안 내 재산권에 피해를 줬 다면 지사 님 가만히 있겠습 니 까, 화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 (2015년 10월5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는 풀 때가 됐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 왔는데 2500만 명 다 먹 는데 4만 명 먹 는 물을 가지고 온갖 사방 10km 를 규제를 묶 어 놓고 자 기 쪽에는 규제 하나도 없고 우리 쪽 안성하고 용인 쪽만 규제 하면 않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그것은 옳지 다, 저는 그런 데 동의하시 는 걸로 알고 빠른 시 일 안 에 용역 주셔서 평택 시장 또 평택에 관련 된.....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 (2015년9월11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수도 권에 규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묶 여 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자연녹지 행위를 너무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 까 땅값은 비싸 지요. 건축비 비싸지요. 그리고 아파 트 값, 집값 자꾸 올라가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자연녹지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 다, 그렇게 해 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0%를 3 0%로 좀 올려준다든지, 토지값 을 좀 낮춰 야 관광호텔도 오 짓고 또 기업도 들어 고 또 아파트도 낮게 분양 할 수 있는데 다 토지 값 비싼 데, 건축비 비싸고, 그러고서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떻 게 2억, 3억, 4억 주고 집을 마련합니까? 월급 받 아 가지고 연봉 2000, 30 00만 원 받는데 그 연봉 어어떻게 집 을 마련해요?"	○			
2014년도국감-국토교통 (2014년 10월27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수도권 규 제도 이제는 많이 좀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같은 데는 전혀, 가장 낙 후된 지역이거든요, 연천 같은 데 가 보면요. 그래서 이 제 행정도시로 다 내려갔고 공 기업도 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그런 것 따지지 마 시고 수도권 규 제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 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규제를 많 이 받았기 때문 에 엄청난 재산상이나 모든 면에 피해 본 부분도 많으니까 수 도권 규제 완 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12년 10월11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본 위원 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지역구 에도 에버랜 드도 있고 민 속촌도 있고 스키장이 2 개 있고 골 프장이 30개 있고 박 물관이 10여 개가 있고 이렇 게 많은, 1년 에 약 1500만 명이 오는 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숙박시 설이 없 다 보니 까 많은 관 광객들이 왔다가 불편 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 광사에서 중양부처에 다가, 수도권 규 제 숙박 문 제가 해결이 안 되어 서 많은 외국 관 광객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도 보고 또 불편해 하고 있잖아요"	○			
제19대국회 제334회 제6차 국회본회의 (2015년 06월 24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최근 정부가 비도시 지역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대부분이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19대국회 제334회 제6차 국회본회의 (2015년 06월 24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30년이 넘게 수도권정비계획 묶였고요. 또 지금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 시,군은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속에서 재산권이 모든 문제에 지금 너무나 규제가... 해제할 필요가 있다. 또 이거를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			
제19대국회 제331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5년 02월 27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기업이 수도권 규제나 또 1만 4000개 되는 규제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이 런 부분을 이제 각 부처 장관님들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규제완화하는데 또 규 제 속에서 시행령을 완화하면서 또 얼마든지 행위할 수 있는게 많은데요.	○			

제19대국회 제329회 제7차 국회본회의(2014년 10월 30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이제 모든 규제 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우리 행정도시도 이전했고 또 많은 공사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이미 이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이제는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 부동산 꼭 아파트나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토지나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에도 양동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한시적이라도 좀 완화해서 모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제19대국회 제329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4년 10월 30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1년에 1500만명 관광객이 옵니다. 규제 때 문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받지요. 또 2000만명이 먹는 팔당상수원보호 규제 받지요. 또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받아요. 삼중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과연 150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숙박이 없어서 아주 초라한 그런데 가서 자고 또 제일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 숙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관님도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지요?	○			
제19대국회 제320회 제12차 국회본회의 (2013년 11월 21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수도권의 경기도만 해도 1250만명이 살고요. 또 영남, 호남 또 충청,강원,제주에서 다 와서 사는 겁니다. 경기도민은 1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 고향 떠나와서 수도권에 와 살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 줘야지 이것을 다 묶어 두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			
제19대국회 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08월 18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수도권 규제가 30년동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물론 각 지역마다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부처도 세종시로 이관이 됐고요. 공기업도 모두 다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계속 묶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			
제19대국회 제33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6월 16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지금 우리는 7개 시군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3중 규제를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1년에 1500만명 관광객이 오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용인 땅 가면 다 자연녹지로 해 놔요. 공단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요. 그런 것 다 과감하게 푸세요. 자연녹지에서 행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이런 것 좀 만들게 해주셔야지 국토부가 무슨 권한 가지고 만날 그런 저기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한테 과감하게 위임할 것은 위임해 주시고요.	○			
제19대국회 제331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2월 10일)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하남	용인 같은 데는 말이에요 도시지역의 거의 80%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수도권 규제 받지요. 수도권 인구 2500만명 수돗물 먹이느라 용인 땅 70%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묶여 있지요. 또 일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그 안에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제337회 9차 국회본회의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	"○노철래 의원 국무총리께서 지난 7월 30일 제1 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는 투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규제로 인한 투자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정부의 발표를 매우 반겼으나 국토부 설명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 으로 지난 7 월 30일 발표한 공장 신설 증설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방안 은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전 국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건축 규제를 완화 하자, 전 국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 규제를	○			

				<p>완화해서 기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수도권에 특정된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p> <p>○노철래 의원 특정된 지역이, 수도권이 지금 전체로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생각하고 국토부 생각은 좀 따로 가는 인상인데 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수도권의 기업 신증설 규제에 투자 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하고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이 2조 2398억 원의 손실 규모로 엄청나게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p> <p>○국무총리 황교안 자연보전권역 등의 수도권 규제 중에서 일부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노철래 의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산업시설 입지에 따른 오수 및 폐수 관리가 전혀 문제없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p> <p>○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렸 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규제 중에는 일부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개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의원 그 개선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p>				
제320회 10차 국회 본회의 20131119	노철래 의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p>지역의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줘야 이 지역이 역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p>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9차 국회 본회의 (2015년 10월 16일)	노철래 의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p>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산업시설 입지에 따른 오수 및 폐수 관리가 전혀 문제없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p>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9차 국회 본회의 (2015년 10월 16일)	노철래 의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p>수도권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제도는 입법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이전 제한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입니다. 자연보전권역제도, 지역주민의 고통과 역차별을 키우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p>	○			
제19대국회 제320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2013년 11월 19일)	노철래 의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p>지역이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줘야 이 지역이 역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p>	○			

제19대국회 제3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11월 06일)	노철래 의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	수도권 규제 중에 4년제 대학 이전 문제는 예를 들어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가 아니고 또 사회적 합의도 결국에 수도권의 어떤 이게 대학이라는 단순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라고 사는 쪽에서도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			
제19대국회 제3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1월 01일)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70~80년대에 입주해 가지고 30,40년 지나서 시설교체 및 생산라인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자연보전권역을 확대 허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			
제19대국회 제33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6011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	"이것이 구리시 토 평동 일원의 약 24만 4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곳에 외국 으로부터 디자인기업을 약 20 00여 개 유치하고 또 연간 3 0회 정도의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컨 벤션을 열고 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 자가 약 100 억 불, 그러니 까 한 12조 정도가 되 겠지요. 이렇게 수 도권에 일자리 도 만들고 또 경제적 파 급효과도 높은 이 사업을 통해 서 디자인 컨 벤션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연간 한 1 80만 정도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 이 됩니다. 마이스(MICE) 산업 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사 업 에 대해서 우 선 조건부지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한 것에 대 해서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19대국회 제33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3월 09일)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따라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45년 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 사는 일반 국민보다 엄청난 규 제로 인해서 피 해를 보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 습니다	○			
제19대국회 제331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2월 10일)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래서 저는 이 시 점에서 우리 국토위 내에 그린벨트개선소위 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이행강제 금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이미 반세기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제도 개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가 계속 크고 있는 데 조그만 옷 을 성장하는 아 이에게 계속 입으라는 격이지요. 그래서 최 근 국토부, 정부에서도 그린벨 트 내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 트 내에 실제로 그린 땅, 푸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 해되는 사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손톱 밑 가 시를 뽑아 주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제19대국회 제33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5월 11일)	이노근	"새누리당/"	노원구갑	"그런데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린벨트다, 기금 지원이다, 세 제 지원이다, 용적률의 문제 다, 이것을 자꾸 특혜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무슨 공 단을 만들거나 공공시설 을 짓거나 또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얼마만 한..... 지금 관점 같은 논리 로 한다면, 각 분야에 세금부터 재 정 지원부터 보조금부터 그 린벨트 해제부터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유 독 이 주택의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을 특 혜라고 자꾸 매도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			

제320회-국토교통 소 위 제 2 차 (2013년 12월6일)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이게 개발이익환 수 에 관한 법률 말고 지금 주로 문제가 되 는 것이 무허가건물하 고 그린벨트의 문제인데 예 를 들어 대학 같은 경 우에 캠퍼스에 건물을 지으 려고 그래도 대학 내 에 그린벨트로 된 데가 많 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건물 한번 지으려면 3 0억 50억씩 훼손부 담금을 내야 돼. 지금 서울시 내 대학 들이, 수도권 대학들이 다 그래 요. 굉장 한 저기거든요.		○		
제320회-국토교통 소 위 제 2 차 (2013년 12월6일)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예를 들어서 해 제를 했는데 종전 에 그린벨트였을 때의 지가 하고 보금자리지구 해 제했으면 그린 벨트지 구로 복귀 안 하 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해서 본 인들이 개발 할 때, 시가화조정 지역이라 개 발 못 하는 것 아 니까 그 범위 내에 서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부 담금을 줌 내야 되지 않느냐 이 얘 기예요.		○		
제316회-국토교통 소 위 제 1 차 (2013년 6월20일)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아니, 합법적으로 하 더라도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똑같 이, 제가 우리 관내 예를 들면 삼육대 학교가 있 어요. 그런데 학교시 설 조금 뭐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 니까 그린벨트 지 역 을 침범을 했어요. 16억을 내 라는 거예요, 1 6억을. 이게 학교 망 하라는 거지. 그러면정부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그래서 아예 이 것 제 도 를 개선해서 학교나 도 로나 일부 극 히 제한적인 부 분에서는 감면 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		
제316회-국토교통 소 위 제 1 차 (2013년 6월20일)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마인드 를 바꿔야 지 차관이 무슨 30년 전 사고를, 그린벨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		
제316회-국토교통 소 위 제 1 차 (2013년 6월20일)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뭐냐 하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그린 벨트를 해제할 때 그때 용역 을 어디에 줬느냐 하 면 영국한테 줬 어요. 영국 이 그린 벨트가 최고로 잘됐다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면 영국 의 그린벨트의 취지는 한 국 과 같은 개념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 어요. 그래서 그 때 풀 수 있는 일부 명분이 생겼는데, 지금 이런 게문제가 되 고 이런 데는 이미 다 상당 부분 훼손이 된 거고.		○		
제315회-국토교통 소위제2차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지금 말씀하시는 데 이런 것이 있 어요. 그린벨트와 인접한 동 네에 필요한 시설 있 잠파요, 그것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까 실질적으로는 같은 동네 인데 그린벨트가 아닌 바로 옆에, 예 를 들어서 어 린이집을 하나 짓는다 든지 그런 것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될 거야. 그린벨 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렇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 트 지역에는 사 람이 안 살아 . 거기 한 두 가구가 있 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 야, 그런데 이미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 어린이집 하나 지 으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		
제313회-국토해양 소 위 제 1 차 (2013년	이노근	" 새 누리 당/	노원구갑	"그런데 이런 지 역은 보면 데드벨 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 고 그래요, 블랙벨 트. 이미 그린벨 트가 아니예요. 그런 데 정부에서는 억 지 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 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		○		

2월27일)				트 지정해서 그런 것인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 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1억, 2억 낼 겁니까? 못 내, 이 사 람들.이거 어떻게 내 ? 그러면 땅 수용해 버 릴 거야, 체납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다 범 죄행위 만드는 거야. 1억을 2 억으로 올린다 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 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누 적되면 5억, 10억, 100억 가요, 나중 에 10년 가 면. 이거 그럴 것 아 닌니까? 100억 가 면 땅 뺏어 갈 거야? 이거 안 된 다고."				
2013년도국감-국토교통 (2013년10월24일)	이노근	" 새 누 리 당/	노원구갑	그런데 더 이상한 얘기는 , 아니,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중 정 부 시절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고 일부 그냥 조금만 문제 삼고..... 그것만 그랬 습니까? 신도 시, 혁신도시, 세 종시, 그분들 논리라면 자 연 파괴지요 , 환경 파괴고. 그 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		
제330회-법제사법 제1차 (2014년 12월24일)	우윤근	더불어민 주당	전남 광양시 구례군	그런데 ' 삭도 산업이 필 요하다' 이런 얘기를 양 쪽 지사가 다 해요. 저도 들어 봤는데 충분히 일 리 가 있다. 자동차도로가 올 라가는 데 훨씬 더 그것이 공해가 심 하고 자연 오염이 심하다, 그래 서 삭도가 필 요 하다. 그래서 여러 개 할 수는 없 고 영호남 지역 에 대표적으 로 하나씩 하는 게 좋 겠다, 세 이게 양 지사 얘기인데요, 어떻게 평가하 요? 저는 충 분히 일리 있다 보는데요.			○	
제330회-법제사법 제1차 (2014년 12월24일)	우윤근	더불어민 주당	전남 광양시 구례군	"그런데 농촌 도 시들인데 산업이 람지 이런 게 없 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민들이 경제적으로 어 려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 삭도 산업이 필 요하다' 이런 얘기를 양 쪽 지사가 다 해요. 저도 들어 봤는데 충분히 일 리 가 있다. 자동차도로가 올 라가는 데 훨씬 더 그것이 공해가 심 하고 자연 오염이 심하다, 그래 서 삭도가 필 요 하다. 그래서 여러 개 할 수는 없 고 영호남 지역 에 대표적으 로 하나씩 하는 게 좋 겠다, 세 이게 양 지사 얘기인데요, 어떻게 평가하 요? 저는 충 분히 일리 있다 보는데요."			○	
2015년도국감-환경노동 (2015년 10월7일)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오늘도 어김없이 강원도 설악산 에 설치할 삭도 ,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주 장이 계속해 서 제 기되고 있고, 그 시행 빨리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 두려 워 가지고 계속해서 1년 연기하 라, 2년 연기하 라라고 얘기 해서 아마 이것을 지 켜보는 강원도민 들 께서 굉장히 불쾌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2015년도국감-환경노동 (2015년 9월10일)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그것은 뭐 아마 일 부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사례도 인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 6기가 매일 돌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 거든요. 그리고 그것 이 이제 케이블 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 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